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2021~2025)

목 차

I. 정책환경	3
① 대내외 노동여건	3
② 인천시 노동여건	4
II. SWOT분석 및 전략	10
III. 정책방향	11
IV.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과 목표	12
V. 5년간 주요 핵심지표	13
붙임	
1. 연도별 추진일정	15
2.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16
3. 노동정책 추진과제 세부계획	17
4.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62

1 대내외 노동여건

□ 대내외 경기전망

- (세계경제) ‘20. 12. 1일(화) 발표한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 전망

* OECD는 ‘21년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4.2 (‘21)4.2 (‘22)3.7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 ‘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큰폭
하향 조정(9월 5.0%→12월 4.2%)

* 유럽주요국은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20. 4/4분기 성장률이 다시 (-) 기록 예상

- (국내경제)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년 성장률은 △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폭으로 위축

-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어 향후 한국경제는 ‘21년 2.8%, ‘22년 3.4% 성장하며 안정적
성장세 지속 전망되나 일자리는 감소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경기 악화와 자동화 시스템 확산으로
고용충격은 실물경기 충격보다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중기적인 저물가 기조 심화 전망

□ 국내 노동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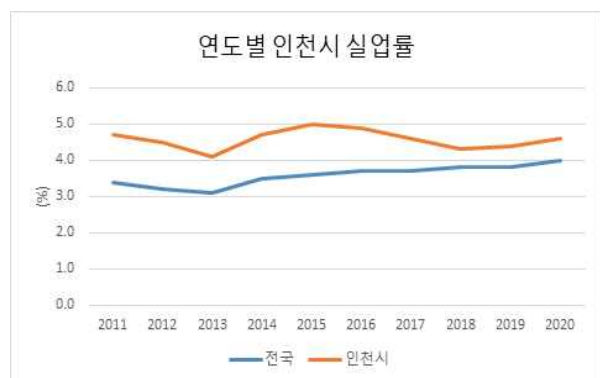
- (고 용)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회복속도·시기 등 불확실성 증가
 - 코로나19 확산세·상용직 채용연기 등을 고려 시,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 어려움 지속 예상
 -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의 가속화로 부문간 노동 이동
및 다양한 고용형태 일자리 급속 확대 전망

- (노사관계) 전반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 후반기는 개정 노조법 안착, 정치상황 등이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 택배기사 등 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망 확대·권익보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
 - 현장 단위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간 고통분담 기조 지속이 예상되나, 일부 취약업종 중심 ‘구조조정’ 문제 등이 갈등 요인 작용 우려
- (산업안전) 산업안전에 관한 시민 인식 증대로 기업·경영자 및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2 인천시 노동여건

□ 경제활동인구 현황

- (경제활동인구) ‘20년 기준 경제활동 인구는 1,634천명(64.2%)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평균 상회함
- (취업률·실업률) 취업자는 1,560천명 (취업률 61.3%), 실업자 74천명(실업률 4.5%)으로 취업률·실업률 모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560천명 중 임금노동자는 1,267천명(81.2%), 이 중 상용직은 857천명(54.9%), 임시·일용직이 26.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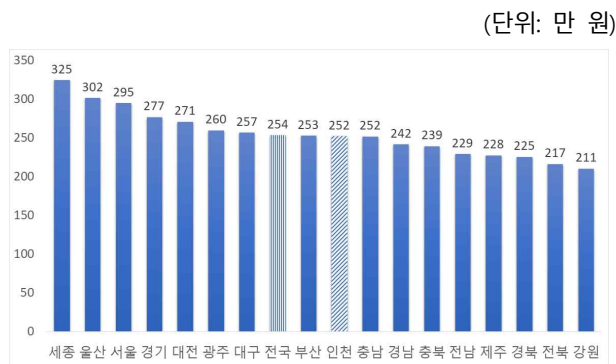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원○	고용원x	
인천시	1,560	1,267	857	337	73	293	76	188	29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년 기준)

□ 임금현황

- (월평균 임금)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으로 전국9위로 확인되며 1위와 비교시 약 73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정규직이 291만원, 비정규직이 155만원임



시도별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



인천시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종사상지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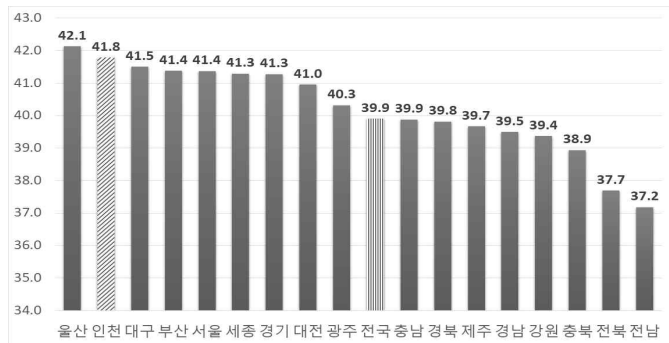
- (성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을 놓고 볼 때 남녀간 100만원 정도 임금격차가 나타남. * 남성 297만원, 여성 197만원
- (종사상 지위별 임금)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52만원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36만원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액인 175만원에 못 미치고 있음
- * 정규직 291만원, 비정규직 155만원

□ 노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 (시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단지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2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높음



‘19년 시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 (정규직 월평균 초과 노동시간) 인천시 월평균 초과노동시간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평균과의 간극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전국 : ‘17년 12.3시간 → ‘19년 10.9시간 / 인천 : ‘17년 14.8시간 → ‘19년 10.5시간

○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 임금노동자중 40~48시간 근무가 63%로 가장 많으나 정규직은 75.7%, 비정규직은 39.6%, 비임금 노동자는 44.6%임

□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 현황) 국가산단(3개), 일반산단(15개), 도시첨단산단(2개)로 총 20개의 산업단지 보유

* 국가산단 : 남동, 부평, 주안

* 일반산단 : 인천지방, 인천기계, 인천서부, 강화하점, 청라1지구, 송도지식정보,
검단, 강화, 서운,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I-FoodPark, 영종항공,
남촌, 계양,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 도시첨단산단 : IHP, 남동

○ (산업단지 비중) 인천등록공장 중 산단소속 사업체 비중 92.6% (11,283개), 등록공장 전체 고용인원의 78%(170,1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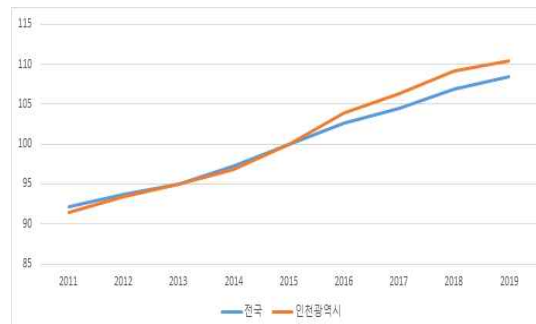
○ (산업동향) 제조업은 점진적으로 하락, 서비스업은 점차 증가, 인천지역 산업의 패러다임이 서비스업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

(단위: %)

<연도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제조업
생산지수(2015년=100) 추이>



<연도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서비스업
생산지수(2015년=100)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고용규모 현황) 인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94.5%에 달하며, 남동구, 서구의 높은 고용규모에 비해 사업장당 평균고용인수는 낮음을 볼 때 중소영세기업 많이 분포함 확인할 수 있음. 그에 비해, 중구, 연수구는 대기업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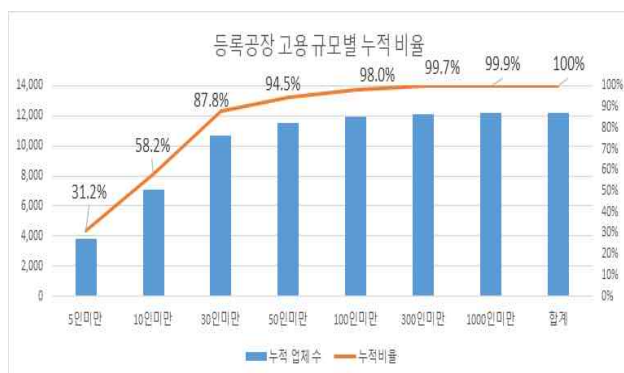
* 인천지역 등록공장 12,178개

* 50인 미만 사업장 **94.5%(11,511개)**, 고용 인원수 비율 **55.6%(120,7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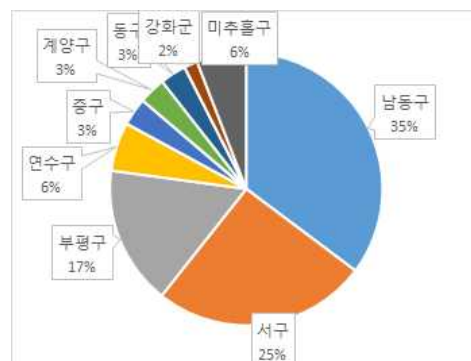
* 5인 미만 사업장 **31%(3,803개)**, 고용인원수 비율 **4.5%(9,739명)**

* 고용규모 순위 : 남동구(35%), 서구(25.5%), 부평구(16.5%), 연수구와 미추홀구(5.8%), 중구(3.3%), 계양구(3.2%), 동구(3.1%), 강화군(1.6%) 순

* 사업장당 평균고용수 : 중구(55.3명), 연수구(45.5명), 동구(30.7명), 부평구(23.5명)
서구(16명), 남동구(15.7명) 순



<고용규모별 사업체 수 및 누적 비율('20.4월말 기준)>



<인천시 고용규모 순위('20.4월말 기준)>

○ (산업재해 현황) 인천시에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지속적 발생

* 연도별 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17년 5,205명(50명) → '18년 5,933명(64명) → '19년 6,046(51명)

* '19년 재해자 수 : 전국 109,242명 중 6,046명

(업무상 사고 5,044명, 교통사고 287명, 업무상질병 714명, 분류불능 1명)

□ **노사관계 현황**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인천시 전체 노동조합수는 감소, 조합원 수는 증가하였으며,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어 꾸준히 증가세임. 주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노동조합'17년 342개→'19년 325개, 조합원'17년 40,665명→'19년 47,516명

* 유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증가세보다 무노조 기업의 노사협의회 증가세가 더 높음

* 유노조 노사협의회 사업장 : '17년 326개 → '19년 353개

무노조 노사협의회 사업장 : '17년 1,642개 → '19년 1,973개

○ (노사분규 등 발생) 노사분규 원인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임금체불 또한 지속 증가

* 노사분규 발생건수 : 5건('17) → 0건('18) → 5건('19)

* 근로손실일수 : 21,885일('17) → 44,711일('19)

* 임금체불 신고현황 : '17년 41,107건→'19년 88,103건

(급증한 사유는 '19년 불황도 큰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청년노동 현황**

○ (인천시 청년 인구 특성) 청년인구 비율은 서울, 대전에 이어 세 번째이며, 고졸자 및 전문대졸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 고졸자 및 전문대졸 비중 : 인천 48.3%, 전국 38.9%, 서울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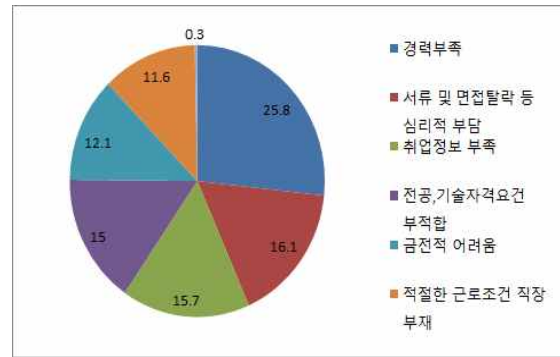
○ (청년 일자리 선택 기준) 임금 외에도 고용안정과 직장의 환경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취업자 : 임금 > 고용안정성 >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 전공 및 기술적합성 등

* 취 업 자 : 임금 > 고용안정성 > 직업의 미래 전망 > 경력발전 가능성 등

○ (취업준비시 겪는 어려움)

노동시장에서 경력자 선호경향 반영으로 경력부족이 1위로 나타났으며, 서류 및 면접탈락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취업정보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 현황

- (비정규직 규모) 인천시 임금노동자 126.7만명 중 비정규직은 41만명 (32.4%)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기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단기간에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

항목	인원 (천명)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현황	1,267	857 (67.6%)	410 (32.4%)

- (비정규직 노동실태) 노동상담을 통해 노동실태를 유추해볼 때 주로 임금, 산업재해, 근로기준,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감정노동 현황

- (감정노동자 규모) 통계청의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른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11개 직종 종사자 규모 추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감정노동자 규모는 558,564명으로 추산되며 성별로는 여성 (63.2%)이 남성(36.8%)보다 많았음
- (정책수립 방안 의견) 인천지역 노동자들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24.2%), 조례 신설(20.7%), 존중 캠페인(15.9%), 감정노동자 유급휴가 지원(14.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 * 다양한 노동단체, 노사민정 인프라 보유
- * 인천시의 강한 노동정책 추진의지,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 * 인적자원 풍부/청년노동력 풍부

약점 [Weaknesses]

- * 거버넌스/협치 경험 부족
- * 노동정책 추진 초기단계
- * 인적자원 유출

기회 [Opportunities]

- * 신성장동력/잠재력 보유
- * 서비스업/제조업 기반 보유
- * 정부의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

위협 [Threats]

- * 제조업 이전, 다수의 영세기업, 산단노후
- * 좋은 일자리 부족, 열악한 노동조건
- * 다수의 취약노동자 존재, 고용불안정
- * 산재, 산업안전 문제 잠재
- * 정부의 전향적인 노동정책 부재

S.W.O.T. 전략

SO전략 [강점활용 기회확대]

- 노사민정 인프라 활용, 활발한 현안논의
- 적극적인 노동기본권 확대 사업 추진
-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청년노동 활용

WO전략 [기회활용 약점보완]

- 노사민정 뉴거버넌스 구축
- 산업현장에서 체계적 노동정책 추진
- 정부정책을 활용한 지역숙련체계 구축

ST전략 [강점활용 위협최소화]

-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 체계적 노동정책을 통한 노동기본권 및 산업안전 강화
-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활용

WT전략 [생존전략]

-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 산학 연계를 통한 청년노동력 숙련체계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인천형 노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 노동정책 인프라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근거 마련)
-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적극 추진
-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복지 격차 해소

☐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 생활임금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 근무환경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노동정책 효과 제고

- 인천의 노동현안 공유 및 해결책 공동모색
- 노동단체·사회단체·사용자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 노동존중 인식의 확산

- 노동존중 캠페인 및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노동상담 확대
- 감정노동 보호, 직장내 노동존중 문화 정착

☐ 취약계층 포함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실천

- 노동단체 및 노사협의회 설립 지원
-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표준노동기준 마련 및 정착 지원

IV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 구현

목표

구분	현재	'21년	'22년	'23년	'25년
고용률	66.5% (전국8위)	70.6%	71.2%	71.6%	전국1위
근로여건 만족도	30.7 (특광역시4위)	31.5	32.1	33.7	특광역시1위
노사민정 활성화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전국1위

4대 추진전략

14개 실천과제 35개 세부사업

전략별 실천 과제

일과 삶의 균형

- ①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모니터링
- ② 노동복지 강화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통근버스 운영, 작업복 세탁소 설치
- ③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
 -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표준노동기준, 산업재해예방

노동권익 향상

- ①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 중소기업 노동문화 개선 및 일경험 사업 확대
- ②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③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 ④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 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보호사업

노사상생 강화

- ① 노사상생 지원
 -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및 노무 컨설팅
- ② 지역사회 상생지원
 - 노사상생우수기업 육성 및 체불임금 방지

거버넌스 강화

- ① 노동행정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② 경영참여 확대
 -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및 노사협의회 운영지원
- ③ 거버넌스 강화
 - 노동단체 네트워크 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④ 지원조직 강화
 -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근로자문화복지시설 확충

일과 삶의 균형

작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 ▶ 생활임금 적용 확대 : ('21년)시, 산하기관 → ('25년)시, 산하기관 + 민간위탁, 용역업체 ('25년까지) 민간부문 생활임금 인증제 20개소
- ▶ 노동시간 단축 위한 실태조사 : ('25년까지) 민간부문 실태조사 2회 실시

노동복지
강화

- ▶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 ('25년까지) 8개 1,600백만원 지원
- ▶ 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이용 : 매년 3,600명 이상
- ▶ 작업복 공동세탁소 1개소 시범 설치 운영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

- ▶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 ('25년까지) 11개소 구성, 노동자교육 및 워크숍 지원 31회
- ▶ 표준노동기준 근로계약서 체결 협약 : ('25년까지) 150건
- ▶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 안전관리 교육(매년 4회), ('22년까지) 스마트산단 구축완료
-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 ('21년) 조례제정, 전담팀 신설,
-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운영 : ('21년) 위촉, ('25년까지) 사업장 120개소 점검

노동권의 향상

청년노동자
권리보장

- ▶ 중소기업 노동문화 환경 개선 : ('25년까지) 강사비 지원 40개소, 컨설팅 수행 17개소, 실태조사 1회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21년) 스마트혁신기업 일자리 지원 100명 ('25년까지) 지역기업연계형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수 120명
- ▶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 ('25년까지) 통계보고서 발간 3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강화 : ('21년) 시→('25년) 시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 ('25년까지) 홍보 및 캠페인 45개소
-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21년) 위원회 설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 ▶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 ('21년)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권익센터 내 전담인력 확보
- ▶ 감정노동 인식 개선 : ('21년)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민간부문 업무협약 체결 ('22년) 상담네트워크 구축
- ▶ 감정노동 치유활동 지원 : ('25년까지) EAP지원 230회, 교육지원 45회, 매뉴얼보급 70개소

여성노동자
권리보장

-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21년) 실태조사 ('22년) 정책발굴 및 시행체계 연구
('24년) 공공부문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25년까지) 정규직 채용수 488명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 ▶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 ('21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수립
('25년까지) 윤리교육, 홍보 및 캠페인 연중 운영
- ▶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사업 : ('21년) 계획수립, 근거마련
('22년) 인력확보 ('25년까지) 교육·홍보, 사업 발굴 추진, 법률컨설팅 운영
-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21년) 설치
- ▶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확대 : ('25년까지) 상담 42,200건, 교육·홍보 180회

노사상생 강화

노사상생
지원

- ▶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사업 : ('25년까지)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59건, 공모선정 7건
-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 ('25년까지) 지원 영세사업장 수 21건

지역사회
상생지원

- ▶ 산업평화 대상 시상제도 개선 : ('21년) 규정개정 ('25년까지) 규정개정에 따른 수상기업
선정 매년 2건
- ▶ 건설노동자 체불임금방지로 소리통 민원 접수 건수 축소 : ('21년) 10건 → ('25년) 6건
-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21년) 위원회 설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

거버넌스 강화

노동행정
체계구축 및
전문성강화

- ▶ 노동행정 체계 구축 : ('21년) 노동안전팀 신설 ('23년) 노동권익팀 신설
- ▶ 노동정책 통합전문기관 설립 : ('22년까지) 개소 및 운영

경영참여
확 대

- ▶ 공공부문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 ('22년까지) 2개소 신규선임 (누계 13개 운영)
-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 ('25년까지) 캠페인 및 설명회 매년 4회 개최

거버넌스
강 화

- ▶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확대 지원 : ('25년까지) 토론회 및 포럼 운영 17건
-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25년까지) 워크숍, 세미나 등 매년 4건

지원조직
강 화

- ▶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운영 : ('21년) 개소 및 운영
- ▶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시설 확충 : ('23년) 검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 신축
-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5년까지) 46,021명 이용

추진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서	연도별				
				'21	'22	'23	'24	'25
① 일과 삶의 균형 (8)	1.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2)	1-1. 생활임금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노동정책과					
		1-2. 노동시간 단축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제도	노동정책과					
	2. 노동복지 강화 (2)	2-1.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노동정책과					
		2-2. 노동복지 확대 강화	노동정책과 일자리경제과					
	3.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 안전 강화 (4)	3-1.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	노동정책과					
		3-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표준노동기준 마련	노동정책과					
		3-3. 화재 및 폭발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생활환경과 산업진흥과					
		3-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노동정책과 사회재난과					
② 노동권익 향상 (15)	4.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3)	4-1. 중소기업 노동문화 환경 개선	노동정책과					
		4-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4-3.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청년정책과 데이터혁신담당관					
	5.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3)	5-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동정책과 총무과					
		5-2.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사업	노동정책과					
		5-3. 민간위탁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도개선 추진	정책기획관					
	6.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3)	6-1.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노동정책과					
		6-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인식개선 사업 및 협력 구축	노동정책과					
		6-3. 감정노동 치유활동 지원 사업	노동정책과					
	7.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2)	7-1.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정책과					
		7-2.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복지정책과					
	8.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4)	8-1.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건축계획과					
		8-2.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 사업	노동정책과					
		8-3.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노동정책과					
		8-4.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확대	노동정책과					
③ 노사상생 강화 (4)	9. 노사상생 지원 (2)	9-1.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사업	노동정책과					
		9-2.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노동정책과					
	10. 지역사회 상생지원 (2)	10-1. 산업평화대상 시상 제도 개선	노동정책과					
		10-2. 건설노동자 체불임금방지 시스템 강화	건설심사과					
④ 거버넌스 강화 (8)	11. 노동행정 체계 강화 (1)	11. 노동행정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노동정책과					
	12. 경영참여 확대 (2)	12-1. 공공부문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재정관리담당관					
		12-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노동정책과					
	13. 거버넌스 강화 (2)	13-1.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확대 지원	노동정책과					
		13-2.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동정책과					
	14. 지원조직 강화 (3)	14-1.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운영	노동정책과					
		14-2.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시설 확충	노동정책과					
		14-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노동정책과					

(단위:백만원)

세부과제	계	재원별			연도별				
		국비	시비	기타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14,930	18,955	79,931	16,044	25,265	31,902	21,673	17,238	18,852
1-1. 생활임금 적용 확대	8,084		8,084			1,976	2,006	2,036	2,066
1-2. 노동시간 단축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제도	100		100			50		50	
2-1.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3,200	1,600	1,600			400	800	800	1,200
2-2. 노동복지 확대 강화	5,375		3,775	1,600	1,039	1,129	1,069	1,069	1,069
3-1.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	22		22		4	4	4	5	5
3-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표준노동기준 마련	22		22		4	4	4	5	5
3-3. 화재 및 폭발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7,090	1,500	5,590		5,015	2,015	20	20	20
3-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65		65			10	15	20	20
4-1. 중소기업 노동문화 환경 개선	356		356		3	33	160	80	80
4-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550	925	1,625		2,150	100	100	100	100
4-3.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60		60		20		20		20
5-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24		24		4	5	5	5	5
5-2.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사업	90		90		10	20	20	20	20
5-3. 민간위탁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도개선 추진	208		208		208				
6-1.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37		37		6	7	8	8	8
6-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인식개선 사업 및 협력 구축	30		30		5	10	5	5	5
6-3. 감정노동 치유허동 지원 사업	30		30		5	10	5	5	5
7-1. 성별 임금격차 해소	420		420		50	60	60	100	150
7-2.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30,948	4,715	11,789	14,444	4,154	5,113	6,153	7,192	8,336
8-1.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비	예	산				
8-2.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 사업	130		130			85	15	15	15
8-3.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1,630		1,630		430	300	300	300	300
8-4.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확대	3,380		3,380		676	676	676	676	676
9-1.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사업	150		150			20	30	40	60
9-2.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42		42		6	6	10	10	10
10-1. 산업평화대상 시상 제도 개선	35		35		7	7	7	7	7
10-2. 건설노동자 체불임금방지 시스템 강화			비	예	산				
11. 노동행정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비	예	산				
12-1. 공공부문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비	예	산				
12-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80		80		10	10	20	20	20
13-1.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확대 지원	130		130		20	20	30	30	30
13-2.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1,065	255	810		213	213	213	213	213
14-1.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운영	8,200		8,200		2,000	1,500	1,500	1,600	1,600
14-2.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시설 확충	27,342	9,960	17,382		6,419	15,312	5,611		
14-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4,035		14,035		2,807	2,807	2,807	2,807	2,807

① 일과 삶의 균형

1.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1-1. 생활임금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20

1-2. 노동시간 단축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제도 22

2. 노동복지 강화

2-1.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23

2-2. 노동복지 확대 강화 24

3.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

3-1.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 26

3-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표준노동기준 마련 27

3-3. 화재 및 폭발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28

3-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30

② 노동권익 향상

4.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4-1. 중소기업 노동문화 환경 개선 31

4-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32

4-3.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34

5.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5-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35

5-2.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 안전망 지원 사업 36

5-3. 민간위탁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도개선 추진 37

6.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 6-1.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38
- 6-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인식개선 사업 및 협력 구축 39
- 6-3. 감정노동 치유허동 지원 사업 40

7.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 7-1. 성별 임금 격차 해소 41
- 7-2.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42

8.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 8-1.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43
- 8-2.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 사업 44
- 8-3.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45
- 8-4.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확대 46

③ 노사상생 강화

9. 노사상생 지원

- 9-1.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사업 48
- 9-2.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49

10. 지역사회 상생지원

- 10-1. 산업평화대상 시상 제도 개선 50
- 10-2. 건설노동자 체불임금방지 시스템 강화 51

④ 거버넌스 강화

- 11. 노동행정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52

12. 경영참여 확대

12-1. 공공부문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54

12-2.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56

13. 거버넌스 강화

13-1.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확대 지원 57

13-2.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58

14. 지원조직 강화

14-1.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운영 59

14-2.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시설 확충 60

14-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1

1.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보장

1-1

생활임금 정착 및 민간부문 확대

[계속]

□ 추진배경

-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정책 실효성 저하
⇒ 시 민간위탁 업체 및 민간부문 확산 필요
- 시와 자치구간 생활임금 대상이 상이하여 형평성 확보 곤란
⇒ 군·구 협의회 구성 및 생활임금 일원화 필요

□ 생활임금 현황

- 적용대상 :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 산입범위 : 기본급, 교통비, 식대
- 연도별 생활임금 현황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적용대상	시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6,800원	8,600원	9,600원	10,000원	10,150원

□ 주요 사업내용

- 적용범위 확대 추진
(1단계) 시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민간위탁(2022)
(2단계) 시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 용역업체(2024)
- 시 및 군·구 생활임금 일원화 : 산입범위, 적용대상 일원화
 - 시와 군·구 간 실무협의회 구성
 - 생활임금 일원화 및 적용범위 확대 공동 추진
- 생활임금 인증제 공모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역 기업, 음식, 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 대학, 병원, 은행, 언론사 등 공적 성격의 기관

□ 연차별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민간위탁		용역업체	
생활임금 인증제(개)	20	계 획 수립	5	5	5	5
군·구 협의체 운영		계 획 수립	협의체 구성, 운영		생활임금 일원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시비	8,084	-	1,976	2,006	2,036	2,066
①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시비 (추가 소요예산)	8,076	-	1,974	2,004	2,034*	2,064*
생활임금 인증제	시비	8	-	2	2	2	2

① '21년 적용 생활임금(10,150원 적용) 및 매년 물가상승률 1.5% 반영한 예산 추계이며, 생활임금액 및 적용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용역업체 확대에 의한 추가소요예산 파악은 발주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포함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상희	440-4404

□ 추진배경

-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도 미준수 업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건강 및 일가정 양립 방해 우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민간 사업장
- ※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 적용 시점(사업장 규모별)

- ▲ 300인 이상: '18.7.1
-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

□ 주요 사업내용

- 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 노동시간 현황자료 요청 및 준수여부 확인(매년)
- 민간부문 실태조사
 - 초과근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전파, 미준수 업체 시정 요구
 -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향 도출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실태조사(민간)	2회		1회		1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00		50		5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상희	440-4404

2. 노동복지 강화

2-1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신규]

□ 추진배경

- 인천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복지수준이 낮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 인천 전체노동자 107만여명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 : 87.7%(94만여명)

□ 사업개요

- 대 상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 추진방법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일정 범위 안에서 시 지원금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①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② ①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①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금액한도 : 출연금의 100%범위내에서 지원금 지급(기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계획수립
-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추진(노사민정협의회 협업)
- 중앙정부 및 시 재정지원 추진

□ 연차별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동복지기금 재정지원(개)	8	계획수립	1	2	2	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200		400	800	800	1,200
시비	1,600		200	400	400	600
국비	1,600		200	400	400	60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현병훈	440-4412

□ 추진목적

- 산업단지내 교통 및 근무환경 열악으로 인한 노동자 불편 야기
⇒ 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운영과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통한 근무환경 불편 경감

□ 사업개요

[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운영사업 지원]

- 사업명 : 산단 통근버스 운영사업 지원 (사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3개 산업단지 (남동산단, 서운산단, 검단산단)
※ 군·구 대상 공모를 통한 산업단지 선정
- 대상인원 : 입주기업 근로자 약 12만여 명
- 예상 이용 인원(1일)
- 남동산단(2,600명), 검단산단(1,500명), 서운산단(600명)
- 사업예산 : 1,039백만원 (시 719, 구 320)
- 사업내용 : 출·퇴근 시간 산단 내부 및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등을
순환하는 산단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영

[노동자 작업복 무인세탁소 설치 운영]

- 사업명 : 노동자 작업복 무인세탁소 설치 및 운영
- 지원대상 : 인천시 산업단지내 공장 등록된 중소 영세사업장
※ 실태파악후 지원대상 중소 영세사업장 규모 확정
- 사업내용 : 무인세탁소 1개소 시범 설치후 사업평가에 따라 확대운영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 평균 통근버스 이용 인원	-	3,600	3,600	3,600	3,600	3,600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		계획수립	1개소 설치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5,375	1,039	1,129	1,069	1,069	1,069
통근버스 운영사업 지원	소계	5,195	1,039	1,039	1,039	1,039	1,039
	시비	3,595	719	719	719	719	719
	구비	1,600	320	320	320	320	320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비	180		90	30	30	3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윤각현	440-4235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강지민	440-4411

3. 산단노동자 보호 및 산업안전 강화

3-1

산업단지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

[신규]

□ 추진배경

- 인천공장 대부분 산단에 위치, 영세업체로 지역 노동조건 열악, 노조 조직률 낮음 ⇒ 산단내 노동자협의회 적극 설치 필요

※ 인천지역 등록공장 중 산단 소속 사업체 비중(92.6%), 고용인원(78%)
▶ 국가산단 사업체 비중(73%), 고용인원(59%)

□ 사업개요

- 대상산단 : 11개소(국가 2, 일반* 9) * 일반산단 4개소 조성(계획) 중
※ 노동자협의회 구성은 규모별 순차적으로 매년 1~2개소(11개소)
- 사업내용 :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사업 지원 및 구성

□ 주요 사업내용

- 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토론회, 교육, 워크숍 개최
 - (대상지역) 국가 및 일반산단 지역중 규모별순 각 1개소
 - (추진계획)
 - ① 산단지역 노동관련 현황 파악 및 경영자협회 협력
 - ② 협의회 구성 관련 노동자 교육, 워크숍 등 개최
 - ③ 노동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노사민정 “노사협력 조정” 분과협의회에서 토론 등 노사참여 지원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노동자 교육, 워크숍개최	31회	5회	5회	7회	7회	7회
노동자협의회 구성	11개소	-	2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22	4	4	4	5	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 추진배경

- 인천시에 영세사업장 다수 분포, 고용 및 노동조건 열악
⇒ 표준 근로계약 체결 지원으로 노동조건 수준 향상 필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5인 미만 사업체(국가 및 일반산단 중)
※ 5인 미만 : 공장규모(3,803개, 31.2%), 고용인원(9,739명, 4.5%)
- 사업내용 : 시 표준계약 작성관련 노사 협력 및 토론회 개최 등

□ 주요 사업내용

- 인천시 맞춤형 표준 노동 계약서 마련, 협약식 전개
 - (준비단계) 노동부 표준계약서 기준 인천시(안) 마련
※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명시
 - (추진계획)
 - ① 노사민정 분과협의회 논의
 - ② 노동권 보호 및 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 ③ 인천시 맞춤형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 협약추진
- 노사민정 “노사협력 조정”분과협의회에서 토론 등 노사참여 지원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계약서 체결협약	150건	10	20	30	40	5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22	4	4	4	5	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 추진배경

-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안전관리 의식 제고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교육 필요
- 노후화된 산단의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
⇒ 스마트산단 구축으로 노동자 및 시민의 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지원
 -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허가(1,638개소) 및 규모미만
 - 교육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취급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 사업기간 : 2020. ~ 2022.
 - 총사업비 : 130억원 (국비 85, 시비 45)
 - 사업내용 : 산단형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시티 연계 시스템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지원
 - 화학안전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및 교육 홍보 등 참여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배부
- 남동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산업단지 화재 예방
 - 지능형 화재감시, 드론 모바일 스테이션 등을 이용한 산업단지내 화재 가능성 예측 및 조기탐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안전관리교육(회)	20	4	4	4	4	4
스마트산단 구축			구축완료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7,090	5,015	2,015	20	20	20
안전관리교육	시비	90	15	15	20	20	20
스마트산단 구축	소계	7,000	5,000	2,000			
	시비	5,500	3,500	2,000			
	국비	1,500	1,50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생활환경과	환경안전팀	박지영	440-3713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	이교섭	440-4288

□ 추진배경

-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노동자의 생명 및 건강 위협
⇒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 증대
-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 미흡
⇒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전담팀 신설로 해당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현행) 노동행정팀, 노사협력팀 → 노동행정팀, 노사협력팀, **노동안전팀**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운영
 - 근로자, 노동단체, 산업안전 전문기관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예방활동
- 시 발주사업 안전관리계획 관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업체계 구축
 -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패트론티 점검 요청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점검(개소)	120	위촉	30	40	50	5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65		10	15	20	2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정경숙	440-4402
사회재난과	시설물재난관리팀	신훈호	440-1853

4.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4-1

중소기업 노동문화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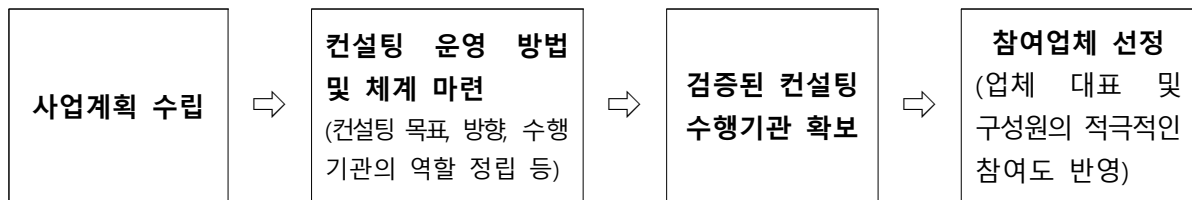
[신규]

□ 추진배경

- 청년층의 취업 이후 단기간내 잦은 이·퇴직 발생사유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조직문화 맞지 않음’ 이 강하게 작용
⇒ 직장내 노동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노동문화 개선 교육 강사비 지원
 - 신청에 의한 강사비 지원 (혹은 강사 파견하는 방식)
 - 기업체에서 노동문화 개선 교육 실시할 경우 강사비 지원
- 노동문화 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



※ 사업의 호응도 및 효과 분석후 연차별 증액

- 정기적인 중소기업 노동문화 실태조사 : 3년 주기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사비 지원(개소)	40	5	5	10	10	10
컨설팅 수행(개소)	17		2	5	5	5
실태조사				실태조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56	3	33	160	80	8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상희	440-4404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가중, 급변하는 고용환경
 - ⇒ 4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가능
- 미취업 청년의 높은 취업의사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력, 실무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등은 부족
 - ⇒ 청년의 경력부족 해소, 진로모색 기회 마련 필요

□ 사업개요

[인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사업)
- 사업비 : 2,250백만원 (국 1,125, 시 925, 기업 자부담 200)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1인 월 최대 180만원, 10개월)
- 지원규모 : 청년근로자 100명
- 지원대상 및 자격
 - (참여기업) 인천에 사업장을 둔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 인천 로봇랜드(R&D 센터 포함) 입주기업
 -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기업
 - * 입주현황 : 스타트업 파크 40개사, 로봇랜드 62개사, 콘텐츠기업 31개사
 - (구직청년) 인천시 주민등록 된 만39세 이하 청년 100명
 - * 만39세 이하 청년기준(2021년) : 1981.1.1. 이후 출생자

[지역기업 연계형 일경험 지원사업]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 (‘20년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 지원대상 : 지역대학생 및 지역 직업계고 학생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사업내용

-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의 학생이 2주~4주간 학생의 선호도 및 전공 관련 직무체험

- 직업계고 일·경험 강화 프로그램

· 취업실전반 : 전문강사를 통한 입사서류 컨설팅 및 모의면접

· 기업체험단 : 기업체 임직원 초청강의 및 기업탐방

□ 연차별 성과목표

구분	성 과 지 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인원(명)	100	100	-	-	-	-
지역기업연계형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수	120	20	22	24	26	28
	참여학교수	80	12	14	16	18	20

* 행안부 공모사업 2022년 공모계획 미정. 행안부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계		2,550	2,150	100	100	100	100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소계	2,050	2,050	-	-	-	-
	시비	1,125	1,125	-	-	-	-
	국비	925	925	-	-	-	-
지역기업연계형 일경험 지원사업	시비	500	100	100	100	100	10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지원팀	오혜원	440-4177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조미선	440-4243

□ 추진배경

- 인천 청년을 위한 노동정책 마련에 있어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실태 파악에 한계
⇒ 인천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분석하여 청년의 특성과 현황 실태파악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노동정책 개발에 도움

□ 사업개요

- 통계종류 : 행정통계(가공통계)
- 작성대상 : 작성기준 시점 인천시 거주 청년층(만19~39세) 인구
- 작성기간 : 2021. 3 ~ 2021. 12 (2년 주기)
- 작성방법 : 행정자료 집계, 연계, 결합하여 분석하는 가공통계

□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통계작성 :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건강 등
 - 인천 청년의 종합적 통계를 파악하여 신규 청년정책 수립
- 데이터를 매개로 시민소통
 - 인포그래픽 결과물 공포 및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제공
 - 타지역 청년통계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KOSIS에 자료제공
- 청년의 고용, 일자리, 급여 등을 파악하여 청년 지원사업 진행 시 활용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계보고서 발간	3 건	청년통계 발간(1차)	-	청년통계 발간(2차)	-	청년통계 발간(3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60	20	-	20	-	2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기획팀	정수련	440-4172
데이터혁신담당관	통계팀	강미현	440-2303

5.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5-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 처우개선

[계속]

□ 추진배경

-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 안됨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과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노력 병행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공공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 현행 : 시 → 확대 : 시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기간제근로자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및 질병휴가) 보장 확대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경조사 휴가 확대 보장 및 휴가 기간 임금 지급기준 개선
 - 기간제 근로자의 질병휴가일수 및 해당 기간 임금 지급 기준 명확화
 - * 취업규칙「인천광역시 공무원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복무지침」정비로 기간제 근로자 휴가 사용 기회를 폭 넓게 보장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임금 처우개선
 - * 현행 : 시, 공공기관 → 확대 : 시, 공공기관 + 민간위탁 + 용역업체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등 지급으로 차별적 처우 소지 없음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전심사제 강화 및 공공기관 확대 수			공사공단		출자출연	
생활임금 운영			민간위탁		용역업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24	4	5	5	5	5

* 생활임금 투자계획은 생활임금 과제(1-1)에 예산 반영함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상희, 김영주	440-4404, 4403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김현성	440-2623

□ 추진배경

- 비정규직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근로기준 보호에 대한 정책요구 사항이 높음
⇒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 및 안전망 등을 통한 사전예방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및 캠페인

□ 주요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
 - 표준계약서 작성, 적정임금 지급, 취업규칙 마련, 휴식·휴게시간과 공간보장, 사회보험 적용 등
 - 시 매체 이용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 업종별, 직종별 찾아가는 홍보 수행
 - '20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비정규직 분포 많은 산업 위주
 - 홍보책자 제작하여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연계하여 수행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비정규직 근로여건 상황 파악
 - * 노동기본계획 수립시 실태조사 실시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홍보 및 캠페인(개소)	45	5	10	10	10	1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90	10	20	20	20	2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박성현	440-4406

□ 추진배경

- 민간위탁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 필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반영

□ 2021년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업현황) 총 107개 사업
- (사업예산) 88,998백만원
- (관리계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연구용역 실시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21년 上) 및 운영(민간위탁 신규사무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재계약 등 심의)
- (연구용역) 민간위탁사무의 종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기간·예산 : 2021. 1. ~ 10. / 208백만원
 - 범위 : 市 민간위탁사무 전체
 - 내용 : ①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개발, 종합성과평가, 환류방안),
②제도 개선(대상사무 적정성 검토기준, 종사자 노동실태 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회계·집행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		지침 수립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208	208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팀	문지현	440-2155

6.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6-1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

[신규]

□ 추진배경

-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경험의 증가로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음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예방을 위한 권리보호 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대 상)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
- (주요내용)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체계 구축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21년 下)
 - 인천 노동권익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감정노동자 상담, 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
- 감정노동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체계구축		기본계획수립 전담인력 확보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7	6	7	8	8	8

※ 전담인력 인건비는 권익센터 사업(과제14-1)에 포함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영주	440-4403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감정노동 보호제도 및 사회적 인식 확산 미흡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대 상)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
- (주요내용)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체계 구축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감정노동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21년下)
 - 감정노동자 대상교육('21년下)
 - 감정노동 권리보호체계 최소기준 가이드 라인 및 매뉴얼 제작('21년下)
 - 캠페인 사업전개 등
- (민간부문 협력 추진)
 - 노·사·민·정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상담네트워크 구축, 교육·상담·캠페인 지원 등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식개선사업		홍보물제작, 교육,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민간부문 협력 추진		업무협약 체결	상담네트 워크 구축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0	5	10	5	5	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영주	440-4403

□ 추진배경

- 인천시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경헒이 높음,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비율이 적지 않음 ⇒ 감정노동 치유허동 지원 사업 필요

□ 사업개요

- (대 상)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
- (주요내용) 감정노동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취약 감정노동자 피해 권리구제 지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치유허동 등 서비스 제공 (노사민정 EAP연계)
- 감정노동자 피해 권리구제 지원 제공 (노동법률상담소 연계)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관 매칭, 교육, 강사 등 지원
- 감정노동자 피해예방교육, 매뉴얼 보급 등

□ 연차별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EAP 지원(회)	230	30	50	50	50	50
교육, 강사 지원(회)	45	5	10	10	10	10
매뉴얼 보급(개소)	70	10	10	15	15	2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0	5	10	5	5	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김영주	440-4403

7.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7-1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신규]

□ 추진배경

- 인천의 성별임금 격차는 33.5%,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6.5% 수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노동 실태 파악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연구용역 시행을 통한 여성노동자 노동실태파악 및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주요 사업내용

- 연구용역을 통한 성평등 노동정책 발굴
 - 인천광역시 여성노동자 고용현황,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석
 -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시행
 -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분석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성 등
 - 성평등한 근로조건·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 제언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성평등노동정책 연구	실태조사	정책발굴 및 시행체계 연구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조례 등 추진기반 마련	공공부문 대상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대상 임금공시제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420	50	60	60	100	15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여성정책과	성주류화팀	윤영수	440-2868

□ 추진배경

○ 인천시, '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공모 선정(' 20.2.)

인천복지재단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 20.12.)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488명)

○ (주요내용) 돌봄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직영시설 및 수탁시설을 통한 돌봄종사자 고용

- 직영시설: 종합재가센터(' 21. 1월 현재 2개소, 연차별 확대)

- 수탁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 21. 1월 현재 2개소, 연차별 확대)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규직채용수(명)	488	125	199 (324)	42 (366)	42 (408)	80 (48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0,948	4,154	5,113	6,153	7,192	8,336
시비	11,789	1,961	2,076	2,313	2,549	2,890
국비	4,715	835	889	943	997	1,051
기타(구비)	14,444	1,358	2,148	2,897	3,646	4,39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지원팀	고경욱	440-2932

8.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8-1

공동주택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신규]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사건 및 열악한 근무환경 이슈화
⇒ 공동주택 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
 -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 필요 사항 누락, 관리규약 위반시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 노동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홍보
 - 「갑질피해신고센터」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상담센터 이용 안내
- 공동주택 대상별 의무교육을 통한 노동존중 문화 확산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상호존중 및 대응조치 내용 포함 윤리교육 실시
 - 소통의 날 운영 시 상호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 대상별 의무교육

-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연 4시간)
-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보임 시)
- (경비원) 경비이론·실무, 직업윤리 등(경비업법, 채용 시 24시간·매월 4시간)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 휴게시설,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 수립
 - 군,구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공간 개선 공사 포함사업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등 검토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동주택내 노동 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수립 윤리 교육 홍보 등 캠페인	윤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윤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윤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윤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건축계획과	공동주택팀	정혜선	440-4727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 적용을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 증가 ⇒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법제화 추진 중

- 정부정책(고용노동부) 협력 및 추진

-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에 따른 교육, 홍보 및 활용 장려
-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발굴 및 법률 컨설팅 제공
- 공정노무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노동단체 설립 지원 및 노사협력 방안 마련

□ 연차별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호사업		계획수립 근거마련	인력확보 교육·홍보 실태조사 법률컨설팅	교육·홍보 사업발굴·추진 법률컨설팅	교육·홍보 사업발굴·추진 법률컨설팅	교육·홍보 사업발굴·추진 법률컨설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30		85	15	15	15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현병훈	440-4412

□ 추진배경

-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 종속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형태 등장
⇒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편익시설 조성 및 노동건강권 확보 필요

□ 추진방향

-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쉼터 조성방안 모색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운영 방안 검토

□ 사업개요

- 시 설 명 : (가칭)『인천시 포바기쉼터』
- 대 상 : 이동노동자
- 설치시기 : 2021년 12월

□ 주요 사업내용

-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공간 마련
-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취업상담,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노동권익 교육 및 직무교육 제공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설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630	430	300	300	300	30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박성현	440-4406

□ 추진배경

- 임금차별을 비롯한 부당대우 경험 적지 않음 ⇒ 노동법률상담 확대 필요
- 노동법 교육 경험 없는 노동자 비율 높음 ⇒ 적극적인 노동법 교육 필요

□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현황

('20.12월기준)

구분	상담소 위치 및 노무사 현황		개소일
*남부근로자 종합복지관 (3개소)	구월상담소 (남동구 구월동)	부장 1	'03년 7월
	서부상담소 (서구 석남동역근처)	노무사 1	'13년 10월
	영종상담소 (중구 운서역)	노무사 2	'19년 7월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3개소)	부평상담소 (부평구 부평동)	노무사 1 변호사 1	'12년 6월
	남동상담소 (연수구 선학동)	노무사 1 소장 1	'13년 8월
	공항상담소 (중구 운서역)	노무사 2	'19년 4월

* 한국노총 :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추가 운영중

□ '20 노동법률상담소 상담현황

('20.12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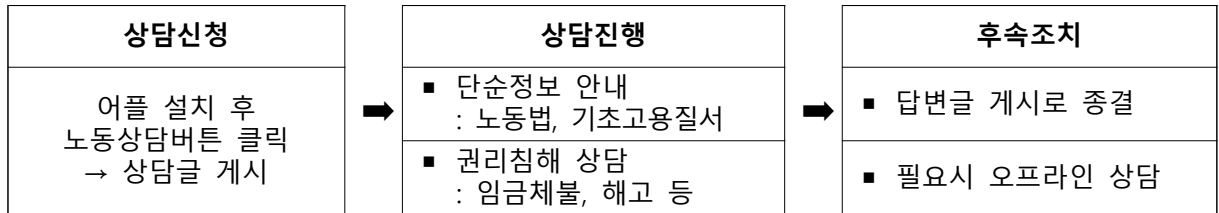
구분	임금	근로 기준	고용 평등	해고	노동 조합	4대 보험	산업 재해	기타 민사	계
남부근로자 종합복지관	1,231	535	108	858	841	510	136	66	4,285
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2,674	243	80	586	230	416	284	256	4,769

□ 주요 사업내용

[노동법률 상담 확대]

-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
 - 유동인구가 많은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역사, 공단지역 등 노무사·상담사 현장 방문 상담

○ 노동법률상담 어플리케이션 운영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 관내 대학교, 청소년관련 센터
- 산업단지 입주 기업 노동자 대상
- 공무원 대상 : 기간제 근로자, 희망일자리 담당자 등
- 시민 대상 : 시민노동법률학교 개소,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건)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담실적(건)	42,200	7,200	8,000	8,500	9,000	9,500
교육·홍보(회)	180	36	36	36	36	3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380	676	676	676	676	676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강지민	440-4411

9. 노사상생 지원

9-1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 사업

[계속]

□ 추진배경

- 노동단체 예산지원 근거 미비
⇒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증가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인천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근거마련(2021)
 - 노동단체 설립이후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지원대상, 사업지원 범위 등 근거 마련,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마련
- 노동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취약노동자 조직화 공동협력
 -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분과협의회 등)
- 취약노동자 조직화 공모사업(2023)

(*취약노동자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등)

 - 공모참가 : 기존 노동조합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등
 - 공모내용 :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조직화
 - 사업목적 : 노동조합 가입이 힘든 취약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단계적으로 이해대변 조직육성을 통한 권익증진 도모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59	10	10	12	12	15
공모선정	10		2	2	3	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50		20	30	40	6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강지민	440-4411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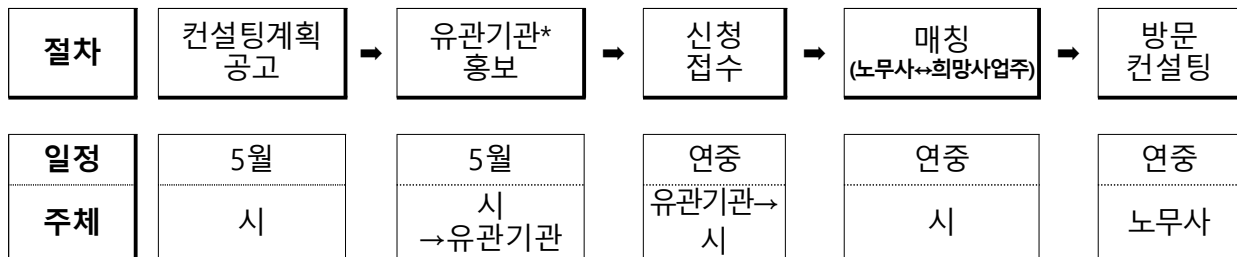
- 인천시에 노무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다수 분포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50인 이하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 전반 상담·컨설팅

- (방 법)



* 유관기관 : 구, 경총, 산업단지 등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 영세사업장 수	21	3	3	5	5	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42	6	6	10	10	1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강지민	440-4411

10. 지역사회 상생지원

10-1

산업평화대상 시상 제도 개선

[계속]

□ 추진배경

- 현행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발기준 및 심의의 공정성 미흡
⇒ 관계규정 개정을 통한 선발기준 명확화 및 심의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산업평화대상 수상 방식 개선

접수방식	■ (기존) 노사단체 및 군·구 추천 → (개선) 본인 직접신청까지 확대
선정기준	■ (기존) 분규예방 및 노사화합에 기여(소극적) → (개선) 노사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노력(적극적)
수상자 혜택	■ 노무사 파견 : 노무관리 컨설팅, 노무상담 실시(무료) ※신청기업 대상 ■ 수상자 인증패 및 인센티브 ■ 기업홍보 : 市 보유 매체 및 언론(신문, 방송) 등, 수상자 소개책자 제작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업평화대상 규정 개정		규정 개정				
수상기업 선정	10	2	2	2	2	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35	7	7	7	7	7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강지민	440-4411

□ 추진배경

-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 ⇒ 공공발주 공사 임금체불 방지대책 도입 필요
- 하도급인 임금체불 사례 발생 ⇒ 하도급 실태점검 필요
- 임금체불, 하도급부조리 등 민원 다수 발생
⇒ 건설공사 관련 민원 전담창구 운영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의무시행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체불방지
-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시행
 - 대상기관: 시, 사업소, 자치군·구, 공사·공단 등 22개 기관
 - 대상사업: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점검내용: 하도급계약체결 적정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이행 여부 등
 - 추진실적: (2020년) 총 476건, 공사비 2조482억 원 점검 완료
- 중소기업 소리통 건설 분야 운영
 - 신고대상: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공사
 - 신고내용: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하도급부조리 등
 - 추진실적: (2020년) 총 11건, 128백만원 접수 및 처리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리통 민원 접수건수	40	10	9	8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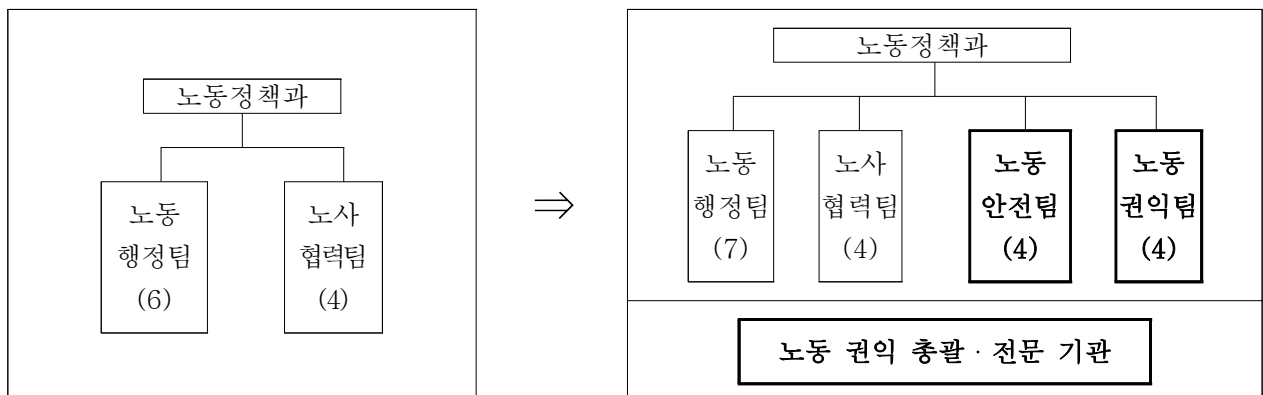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건설심사과	건설관리팀	황윤찬	440-3745

□ 추진배경

- 19. 8월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후 늘어나는 노동행정수요 충당 어려움
⇒ 인원증원 및 팀 신설 필요성 대두
- 노동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분야별 기능 통합·전문성 확보 필요
⇒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일관된 지원 및 해결을 위한 전문통합운영기관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노동정책 전담부서 행정체계 구축 : 노동안전팀, 노동권익팀 추가 신설
 - ※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 (정책기획관실 협의)
 - 노동안전팀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업무
 - 노동권익팀 :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관련 업무, 취약노동자 관련 업무 등



-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 통합·전문 운영 기관 설립<가칭 노동권익재단>
 - 전문인력 확충
 - 실질적인 정책과제 개발 및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 다양한 노동정책의 분야별 기능을 통합 및 체계적 운영
 - 노동환경 실태 파악, 노동 법률 컨설팅 등을 통해 근로자 노동관련 문제 One-Stop 서비스 제공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의 실행 및 사후 관리로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

-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개발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 복지 지원체계 구축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노동행정 체계구축		노동안전팀 신설	노동권익팀 신설			
통합전문기관 설립		설립검토,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개소, 운영	운영	운영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정경숙	440-4402

12. 경영참여 확대

12-1

공공부분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계속]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필요
- 근로자이사의 전문성 저하로 내실있는 제도 시행 어려움
⇒ 근로자이사 직무수행 관련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근 거)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8.12.10. 제정·시행)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마련 ('19. 7. 17.) 기관 송부
- (대 상) 근로자 정원(정관 또는 내부규정) 100명 이상 공사·공단, 출연기관 (7개)
- 5개 공사·공단, 2개 출연기관 (인천의료원, 인천테크노파크)
※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 가능
- (권 한)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음 (근거 : 관계 법령, 조례, 정관)
-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 공기업의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을 처리
** 사업계획 및 자금의 차입·상환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등의 기관의 중요 사항
- 권한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
- (책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책임과 의무
- (임명 현황)

(단위: 명, 2020.12.31일 현재)

기관명	합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계	도시 공사	교통 공사	관광 공사	시설 공단	환경 공단	소계	인 의 료 원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문화재단
정 수	13	9	2	2	1	2	2	4	2	1	1
임명인원	11	8	1	2	1	2	2	3	2	-	1
임명일	-	-	'20. 1.17.	'20. 4. 2.	'20. 7. 1.	'20. 2.10.	'20. 6.12.	-	'19. 9.27.	-	'20.12.24.

*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근로자이사 임명 가능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정 검토 중)

※ 근로자이사들은 『인천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구성 ('20.11.)

□ 주요 사업내용

○ 공공기관 의무도입 및 확대

- 정원 100명 이상 의무도입 기관 근로자이사 선임 지원
- 근로자이사 도입 가능기관(정원100명 이하) 제도 안내 및 관리

○ 근로자이사제 운영 내실화

- 근로자이사 직무수행 관련 필요정보 제공, 교육훈련 편의제공, 이사회 활동 시간 근로시간 인정 등

□ 연차별 성과목표

(단위 : 명)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부분 근로자이사제 활성화 (신규 선임)	2 (누계 : 13)	1 (누계 : 12)	1 (누계 : 13)	- (누계 : 13)	- (누계 : 13)	- (누계 : 13)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관리팀	장원준	440-1692

□ 추진배경

-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저조
⇒ 노사협의회 구성 홍보 및 설명회 개최 필요성 대두
- 노사협의회 조직 후 내실 있는 운영 지원 필요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지원기능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관련 홍보, 상담, 교육 등

□ 주요 사업내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캠페인, 교육 등
 - (대상업체) 고용규모 20 ~ 29인 업체
 - (추진계획)
 - ① 30명 미만 업체중 향후 30인이상 발전가능 업체 집중 관리
 - ② 노사협의회 관련 캠페인, 설명회, 안내책자 등 홍보
- 인천 전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사업 등 홍보 강화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캠페인 및 설명회 개최	20회	4회	4회	4회	4회	4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80	10	10	20	20	2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13. 거버넌스 강화

13-1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확대 지원

[신규]

□ 추진배경

- 양대 노총 및 사회단체 간 지역 노동현안 공유 및 논의 부재
⇒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 운영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대상단체 : 청년, 여성 노동자 및 지역 특화 단체
- 사업내용 : 노동단체 선정 및 네트워크 구성 및 현안논의 및 공동사업 발굴 지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노동단체 선정 및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사업 발굴 지원 등
 - (준비단계) 참여단체 구성을 위한 특화 단체 범위 및 단체 선정
 - (추진계획)
 - ① 노동단체 협의체 구성 및 토론
 - ② 노동 현안사업 발굴 관련 토론회, 포럼 등 지원
 - ③ 노동 현안관련 토론 및 협약, 각종 활동 지원
- 기본 협의회 및 거버넌스와의 관례 및 역할 고려 운영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토론회 및 포럼 운영	17건	3	3	3	4	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30	20	20	30	30	3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 추진배경

- 노사민정 개별 주체들의 개별적·고립적 활동으로 사각지대 발생
⇒ 노사민정 거버넌스 주체의 통합을 위한 조직정비 필요
- 현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기반과 역할이 취약하여 현안해결 어려움
⇒ 개별주체들을 결집시키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동단체 선정 및 네트워크 구성 지원, 협약활동 지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확대·강화
 - (조직인프라 지원강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직체계 정비
 - (조직역량 강화) 위원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 노사민정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 (컨트롤타워 구축) 다양한 노동현안 협의를 위한 하부 협의회 설치 및 전담 조직 구성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워크숍, 세미나 등	20건	4	4	4	4	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065	213	213	213	213	213
시비	810	162	162	162	162	162
국비	255	51	51	51	51	51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14. 지원조직 강화

14-1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 · 운영

[신규]

□ 추진배경

- 다양한 근로자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부재
⇒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이동노동 쉼터 기능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기존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 개발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설립시기 : 2021년 하반기
- 조직구성(안) : 13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3, 팀원8)
* 기획 및 연구팀(4), 비정규·감정노동팀(3), 산업재해 및 교육팀(3)
- 소요예산 : 약 20억원

□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 권익보호 지원(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권리 구제, 지원 등)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한 노동문제 관련 정책연구
- 교육 및 홍보 활동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노동권익센터 개소 및 운영		개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8,200	2,000	1,500	1,500	1,600	1,600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정경숙	440-4402

□ 추진배경

- 서북부지역 근로자문화센터 부재로 지역별 문화·복지 격차 발생
⇒ 점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
- 현 근로자문화센터 건물 노후화로 수강생 만족도 저하
⇒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

□ 추진방향

- (점단 복합문화센터 신축) 서북부지역 근로자 및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단 일원에 복합문화센터 신규 건립
- (가좌 복합문화센터 신축) 문화·복지·체육공간 등 확충을 위하여 現 근로자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2,292.2㎡)에 신축·이전

□ 사업개요

구 분	점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
기 간	2021 ~ 2023년	
위 치	서구 오류동 1657-1	서구 가좌동 484-7
규 모	대지2018.5㎡, 연면적4,250㎡ (지하1층, 지상4층)	대지2292.2㎡, 연면적 5,400㎡ (지하2층, 지상4층)
총사업비	136억원	137억원
주요시설	근로자 교육복지공간,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율(%)	100	30	40	3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7,342	6,419	15,312	5,611		
시비	17,382	1,715	11,795	3,872		
국비	9,960	4,704	3,517	1,739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정경숙	440-4402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취미·교양 여가 활동과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무료상담 실시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2개 기관(근로자문화센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 예 산 액 : 14,03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직업 및 어학능력개발, 건강웰빙, 취미생활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 (124강좌 9,021명)

□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개발(컴퓨터,부동산,노동법률,전산,제과제빵 등), 건강웰빙(댄스,탁구,요가 등) 어학능력 개발(영어,중국어), 취미생활(사진,수채화,공예,색소폰,네일아트 등)
 - 근로자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주간 30%, 야간(주말) 70% 운영)
- 무료노동상담소(남동복지관) :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법률 교육 등
- 북카페 운영 : 근로자들의 휴게 및 독서 장소 활용(이동근로자 쉼터운영)

□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프로그램 이용인원(명)	46,021	9,021	9,100	9,200	9,300	9,4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예산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비	14,035	2,807	2,807	2,807	2,807	2,807

부서명	담당팀명	담당자	행정전화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유성운	440-4408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인천시 소재 직장근무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조사기간 : ‘20. 6. ~ ‘20. 7.
- 표 본 수 : 3,399명
 - 성별분포 : 남성 1,820명(53.5%), 여성 1,579명(46.5%)
 - 연 령 대 : 10대~60대이상
 - * 연령별 비중 : 40대(21.9%), 50대(21.7%), 30대(21.2%)

□ 설문항목

① 고용 및 노동조건

- 임 금 : 사업장 규모 클수록, 고용형태 안정적인 정규직·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이 높음
- 노동시간 : 사업장 규모 클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노동시간보다 김, 정규직,기간제가 노동시간이 김
- 근로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 작성 후 교부(56.8%),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32%)
 - * 특히 무급가족종사자(98.8%), 일용직(70.4%), 특고프리랜서(64%),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45.4%)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휴 가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보유연차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함 * 육아휴직 사용경험 : 사용한적 없음 > 사용

② 노동안전과 건강

- 지난 3년 간 현재 일로 인해 아프거나 사고당한 경험
 - * "없음(82%)> 육체적 질병(8.2%) > 정신적 질병(6.3%) > 육체적·정신적 질병(3.5%)

- 육체적 질병 경험은 농림·임업·어업(16.2%)이 높고, 정신적 질병은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와 정규직(11.3%)의 경험률이 높음
- * 처리 및 대응 방법: 자비로 처리(53.9%) > 회사에서 치료비 등 지원(27.4%) > 산재처리 신청(13.9%)
- * 특고프리랜서(82.9%)와 무급가족종사자(77.5%)의 경우 자비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③ 이력과 경력

- 동일 업종 내에서 이직 경험 다수 발생
-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 * 적절한 근로조건 일자리 부족(31.7%) > 전공, 기술자격요건 부적합(14.4%) > 경력부족(13.7%) > 금전적 어려움(12.9%) > 취업정보부족(12.1%) 등 순임.
- 일자리 선택 시 우선적 고려사항
- * 급여수준(30.2%) > 고용안정성(24.8%) > 직업의 미래전망(9.1%) >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8.9%) > 개인경력 발전 가능성(7.4%) 등

④ 4대보험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4대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음
- * 국민연금 직장가입률 62.8%,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65.5%, 고용보험 가입률 62.2%, 산재보험 가입률 59.3%

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현황

-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재택 및 유연근무 실시 비중 높고, 비정규직은 권고사직 및 해고경험 비중 비교적 높음
- * 유연근무 미시행(65.9%) > 시행함(34.1%)
- * 일자리 상실 가능성 인식 : 그렇다(48.2%) > 그렇지 않다(24.7%)
- 재난상황 정부지원 정책 수요
- * 생활자금 지원(31%) > 실직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 확대(25.2%) >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 해고하지 못하도록 지원(22.9%) > 기업/사용주에게 회사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지원(20.9%) 등

6 부당대우 경험

○ 부당대우 및 차별 경험

* 퇴근후, 휴일 개인적 연락 및 업무지시(12.4%)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11.7%)
> 임금 체불 및 지연(10.7%)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강요(10.4%) > 초과근로 시
수당 받지 못함(9.9%) 등

○ 부당대우 및 차별 경험 이유

* 비정규직(9.1%) > 연령(8.7%) > CCTV, 어플 통한 감시 통제(7.7%) > 성별(7.4%) >
연장근무 수당 등 임금 체불(7.4%) 등

○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 고객/시민/거래처 > 직장상사 > 직장동료

7 고충처리 방식

○ 직장내 괴롭힘 등 경험시 대처 프로그램 · 교육 경험: 약20%

○ 회사내 대처방안

*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79.8%) > 적절한 휴식(55.1%) > 휴직(21.9%) > 병원치료(19.7%) 등

○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비치 여부

* 취업규칙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다수(71.4%)임.

○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기구

* 전반적으로 미비한 가운데 노동조합(6.9%) > 노사협의회(6.8%) > 고충처리
위원회(6.5%) 등으로 나타났음.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의무 설치인 것을 고려했을 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8 성별 주요 노동실태 비교

○ 성별 종사산업

* 여성 : 제조업(17.4%) > 도소매업(15.5%) > 숙박음식점업(12.5%)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3%)
> 교육서비스업(10.8%)

* 남성 : 제조업(21.6%) > 도소매업(12.3%) > 운수창고업(10.5%) > 건설업(10.2%) > 숙박음식점업(6.5%)

○ 성별 고용형태 분포

- * 여성(9.2%)이 남성(4.8%)에 비해 시간제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음.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용직(남성 9.9%, 여성 4.9%)과 파견·하청·용역(남성 3.5%, 여성 1.5%) 비중이 높음.

○ 성별 임금 비교

- * 남성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은 71.2%에 불과함. 같은 산업 안에서도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보다 낮음.

○ 성별 일자리 위험도 인식 비교

- * 남성(56점)에 비해 여성(58.3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험을 조금 더 높게 인식.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경험은 남성(9%)이 여성(8.6%)보다 높으나, 건설업, 생산자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여성 비중이 더 높음.

○ 성별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금전적 어려움(13.1%)과 전공, 기술 자격요건 부적합(16.6%)을 더 많이 겪고 있으나 여성은 취업정보 부족(13.1%), 경력부족(14.8%), 성별 및 학력 등에 대한 차별(7.2%)을 더 많이 겪고 있음.

○ 성별·고용형태별 부당대우 및 차별경험

-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성별로 인한 부당대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대우, 연장 근무수당 등 임금 체불로 인한 부당대우 등 전반적으로 부당대우 및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남성의 경우, 파견·하청·용역 노동자들이 연령으로 인한 부당대우(20.6%)를 많이 겪고 있고, 파견·하청·용역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성별로 인한 부당대우(13%)를 많이 겪고 있음.

[8] 정책수요와 의견

○ (노동정책 수립시 주요대상)

- * 청년(30.3%) > 고령(20.4%) > 여성(16.1%) > 중장년(14.6%) > 청소년(8.2%) > 장애인(6.6%) > 이주노동자·외국인(3.8%)

○ (노동정책 수립시 집중해야 할 주요 취약노동 대상)

- * 민간서비스 감정노동자(15.5%) > 사회복지·돌봄 노동자(14.6%) 제조업 산업단지 중소기업노동자(13.5%) > 청소·경비 노동자(12%) > 건설노동자(11.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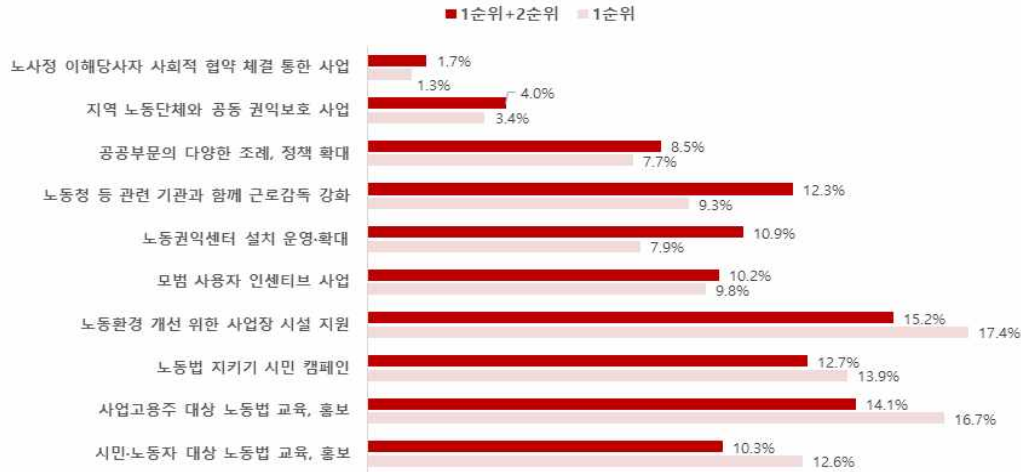
○ (분야별 정책필요도)

순위	분야	평균 점수 (100점 만점)	순위	분야	평균 점수 (100점 만점)
1	안정된 일자리 지원	66.0	9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62.1
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지원	65.5	10	공공행정기관의 지원 통한 민간부문 노동인권 향상 사업	61.9
3	적정임금 보장과 공정임금 유도	64.9	11	노동 행정체계 정비	61.7
4	일과 생활 균형 지원	64.6	12	중앙과 지방정부 노동법 준수 및 협력 사업 구축	61.5
5	노동존중 문화 조성	64.3	13	노동기본권 향상과 노동조합 활성화	61.1
6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64.1	14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60.8
7	노동자 복지 향상	63.9	15	노동자 경영참여 및 모니터링 모색	60.5
8	저임금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62.9	16	특고/플랫폼노동자 보호	60.3

* 필요 0점 ~ 매우 필요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 (민간부문 취약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 노동환경 개선 위한 사업장 시설 지원(17.4%) > 사업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홍보(16.7%)
> 노동법 지키기 시민 캠페인(13.9%) > 시민·노동자 대상 노동법 교육, 홍보(12.6%) 등



○ (산업재해 예방위한 정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통한 산재 예방 활성화(21.9%) > 노동부, 공공의료기관,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지원체계구축(20.9%) > 산재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18.1%) >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지원(15.4%) 등



□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20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사(17명)

○ (우선적 해결 필요한 고용노동 문제)

* 인천 노동시장이 전국평균보다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및 낮은 임금인상을 일자리 질 악화로(임금 및 노동조건 수준 상대적 하락)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의 보호와 차별 해소, 참여와 협력의 노동문화 발전, 노동정책 거버넌스와 생태계 구성에 전반적 부정적 영향 끼침

○ (일자리 질 악화 원인)

지역산업 구성 변화와 기업의 소규모화, 상당수의 제조업 이전, 도시확대 과정에서 질 낮은 서비스업 비중 증가

○ (노동정책에 우선 고려할 대상)

코스메틱 등 제조업 부문 신규 중소기업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유통 및 물류 등의 불안정 노동자, 중고령·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

○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의견)

< 일과 삶의 균형 등 노동복지 강화 >

- * 청년 제조업 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위한 정책적 지원
- * 산업재해 겪은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개입
- * 중소기업 노동자들 위한 지역단위 노동복지 인프라 확대
- * 공동근로복지기금, 노동자건강검진 등 중앙정부 서비스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 기초고용질서와 노동법제도 적용확대 >

- * 지방정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권한과 사업체의 노동기본권 준수 의무 연계
- * 최저임금 및 4대보험 등 보편적 노동기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및 모호한 편법 대응
- * 노동권의 침해받은 노동자들 위한 사려깊은 상담과 포괄적 동행 서비스 제공

<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육성 >

- *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지원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 >

- *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실질적 집행 관리 지원
- * 노동정책 담당부서 인적자원 개발 지속 추진, 공무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훈련
- * 타시도 노동정책 사례조사, 인천시 특화된 노동정책을 위한 연구 필요